

# 건설금융상품들 변화양상 다양

## 건설산업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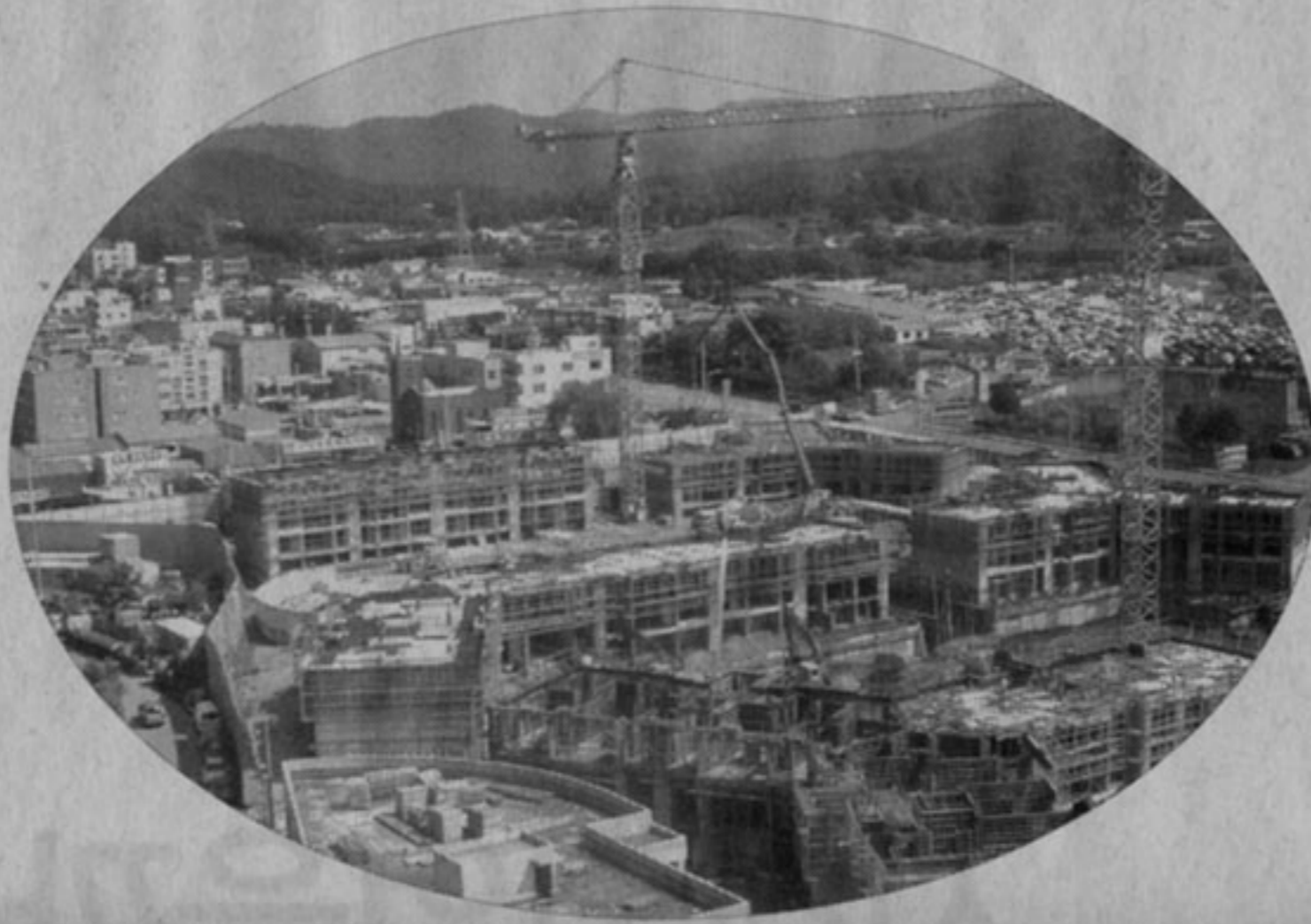
박 광 배 책임연구원



김 혜 원 책임연구원

### 노 재 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건설보증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의무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제도변화와 산업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김재영 등은 최근 건설공사발주제도와 건설생산체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건설공사발주 방식의 변화이며, 구체적으로는 분할 발주 금지규정과 입·낙찰제도 개정,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체계 변화는 겸업제한 폐지로 인하여 유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증수요와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보증상품과 건설용자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증 및 용자와 관련되는 건설산업의 변화양상으로는 발주제도 및 입·낙찰방식 등을 포함하는 계약 관련제도 변화, 수평적인 생산체계 도입,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논의, 건설현장에서 제 조위탁에 의한 생산방식의 확대, 공사 사용 자재 분리발주 확대,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이 건설금융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 입찰방식 등 제도, 상품과 밀접한 관계있어

라서 건설산업에서 필요한 금융상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양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요인은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이 각종 규제가 많고 공공부문이 중요한 발주자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산업을 변화키는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계획은 향후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진생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발주제도를 개편하며 보증제도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주제도 개편과 보증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 각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도급의 확대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가 계획되어 있다.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능인력과 기술인력 양성체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증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기능인력 양성시설 확충과 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설공사 단계별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품질, 안전,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공공계약 관련제도 변화

2009년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118.9조원이며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수준인 58.5조원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정부계약제도는 건설시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선안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진,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 이행의 책임성 강화,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공사 발주와 관련된 제도는 발주과정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3차 계획의 발주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개선과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확대, CM at Risk 도입과 건설

사업관리의 법제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제도와 관련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확대와 CM 활성화는 전문건설업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자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던 단계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원도급자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CM 활성화도 주계약자공동도급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진국형 CM for fee 또는 CM at Risk 도입이 제도화되어 활성화되면 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계속>

제공 / 대한건설정책연구원